



긴급토론회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일 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후 3시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 로 그 램 】

시 간	주요 내용
14:30~15:00	등록
15:00~15:05	인사말/ 참석자 소개
사회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15:02~15:25	[발 제]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에게는 ‘피안(彼岸)’의 불인가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15:25~15:40	[토론1] 장광일 (前 국방부 정책실장)
15:40~15:55	[토론2]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기획 본부장)
15:55~16:10	[토론3]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6:10~16:25	종합토론

【 목 차 】

발제

-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에게는 ‘피안(彼岸)의 불인가 _____ 9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토론

- 장광일 (前 국방부 정책실장) _____ 19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기획본부장) _____ 22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_____ 24

간담토론회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발 제

[발제]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에게는 ‘피안(彼岸)의 불인가

김 태 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7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할 것을 결정한 이후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 연예인 중국 TV 출연 금지, 한류행사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제한 등으로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정부 및 민간차원 대화 제한, 한국인 비자발급 절차 강화 등을 넘어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및 검역 강화, 한국산 배터리 탑재 중국의 전기자동차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전세기 한국 운항 금지, 한국산 화장품 수입금지, 한국 단체여행 전면 금지 등 나날이 새로운 제재를 내놓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내 매장들의 절반 이상이 폐점되었고, 페리를 타고 한국 항구에 들어온 중국 승객들이 상륙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도시들의 길거리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들이 벽돌 세례를 받고 있다.

물론, 중국 내에는 일부 자성론도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15일 폐막 된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CPPCC;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에서 자칭귀 정협 상무위원(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중국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통제가 어렵고 중국의 정치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다. 공산당 일당체제라는 중국의 특성상 모든 신문, 방송, 전문가 등이 일사불란하게(?) 중국정부에 동조하여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국의 일방적 사드 보복이 ‘비합리적이고 모순스럽다. 첫째,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며 사드는 그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둘째,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파괴살상용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방어무기일 뿐이다. 셋째, 사드는 대중(對中)용이 아닌 대북(對北)용이며, 사드가 운용하는 TPY-2 TM 레이더는 이스라엘과 일본에 배치된 것과 같은 조기경보용 전진배치모드(forward-based mode)가 아닌 적 미사일을 식별·추적하는 종말모드(terminal mode)로 유효 탐지거리는 최대 800km에 불과하다. 넷째, 사드 레이더의 탐색거리가 중국영토의 일부에 닿는다 하더라도 흑룡강성, 산둥반도 등에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까지 감시하는 대형 레이더들을 배치하고 수십 개의 군사위성까지 운용하는 핵강국 중국이 사드 레이더를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다섯째, 날로 엄중해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중국의 사드 때리기는 지나치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총 28회에 걸쳐 46발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현재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고래급(2,000톤급) 잠수함 개발, 미사일 고체연료 개발, 신형 미사일 엔진 개발 등에 광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 서만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시대착오적인 ‘종주국 마인드’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와 전문가들이 이런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중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베이징 정부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현재까지도 중국은 사드 배치를 야기한 원인인 북핵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는 자기모순적인 이중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딜레마를 그리고 미국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웃 대국이어서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중국이 사드에 민감한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 첨예한 세 대결이 펼쳐지는 신냉전 구도에서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것은 안보주권의 문제인 반면, 중화질서(中華秩序)의 시대를 열고자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은 사드를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안정적인 한중관계를 위해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한국도 이제는 보유한 지렛대들을 활용하여 맞대응에 나서야 하며, 이는 한국의 무제한적 인내와 양보가 중국의 더 강한 한국 때리기를 초래하여 한중관계를 더욱 심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진행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적 성숙함’으로 대처해야 한다. 800만 유커의 방한이 끊긴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450만 한국인도 중국행을 자제해야 하고, 중국에서 한국 상품이 불매운동에 시달린다면 중국 상품도 한국에서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대중(對中) 경제의존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의존도보다 한국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더 큰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은 한국에게 더 큰 고통을 강요하겠지만,¹⁾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 가졌던 과도한 기대를 접고 지속가능한 ‘한중 간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역시 한중 간 사드 갈등을 ‘강 건너 불’로 간주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당사국이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부터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 중이다. 미국은 2012년에 터키에 탐지거리가 1,800km 이상인 X-밴드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했고, 스페인에는 이지스 구축함들을 배치했다. 2016년에는 루마니

1) 2016년말 현재 한국은 연간 수출의 26%, 수입의 16%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의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수출의 4.3%와 수입의 9.7%를 한국에 의존함. 또한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00% 수준으로 중국 47%, 일본 36%, 미국 30%, 독일 8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음.

아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가동했고, 폴란드에는 2018년 가동을 목표로 기지를 건설 중이며, 독일에는 지휘통제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이를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간주하여 핵군사력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나토 국가들을 위협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²⁾ 반발함으로써 미리 간에도 ‘직은 신냉전’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해당국가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독일, 스페인, 터키, 폴란드 등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이 NATO 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유럽에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사장비들을 반입하거나 철수하는 것도 주권국 간에 서명된 한미 동맹조약(1954)과 주한미군지위협정(1967)에 따른 일이다.³⁾ 다시 말해, 러시아가 나토조약에 의거한 주유럽 미 군사력을 조정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듯, 중국도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에 따라 아시아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것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이는 중국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서부에 주둔하던 대륙간탄도탄들을 흑룡강성으로 이동시키거나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하는 레이더들을 배치함에 있어 주변국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안보주권 사안들이다.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미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에 있어 사활적인 존재이며, 북핵 위협이 가중될수록 동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인 중국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를 희망하지만, 한중관계는 사드 갈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중국의 ‘사드 때리기’에 대해 외교적 수사가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7년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대한(對韓) 사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 정도로 중국이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행동들을 방지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옴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미국 동맹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국민은 4월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東進)에 맞서 2013년 최신형 단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사거리 500km)’를 서부 국경지대 및 역외영토인 칼라린그라드에 배치했으며, ‘보레이급’ 최신형 핵잠수함(24,000톤급)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불라바’를 개발하는 등 핵군사력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음.
3)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제1항: “미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Beijing's Korea Bashing over THAAD: Is it Someone Else's Problem for Washington?

Kim Tae-woo

Professor at Konyang University
and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Beijing has continued to step up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eoul since Washington and Seoul decided to deploy a U.S. missile shield on South Korean soil on February 7, 2016, immediately after Pyongyang's fourth nuclear test. China initiated its retaliatory measures by banning South Korean celebrities from appearing in Chinese TV shows, events with the K-pop content and the broadcast of Korean dramas. And then it restricted Sino-Korean dialogue both at the public and private level and strengthened the visa issuance process specifically targeting Korean citizens. Ultimately, the communist country's reprisal attacks against South Korea have blown into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 For example, Beijing has added new economic sanctions against Seoul such as enhancing of anti-dumping regulations and quarantine for Korean products, removing of subsidies for electric vehicles using Korean-made batteries, blocking charter flights to Korea, banning Korean cosmetics imports and prohibiting Chinese tour groups from visiting South Korea. Also, Lotte Corporation, which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providing the site for THAAD deployment, was another victim of China's crackdown on all things South Korean. Indeed, nearly half of its stores on the mainland were shut down. In addition,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Chinese passengers who arrived at a South Korean port refused to disembark from their ferry, and some Chinese pedestrians vandalized Korean cars on the streets by throwing bricks at them.

Fortunately, there are some critics in China who call for self-examination about excessive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over the issue of THAAD. For instance, Jia Qingguo, a Member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and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Beijing University, stated the following at this year's CPPCC, which ended on March, 15.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careful about economically sanctioning South Korea as such retaliation may deal a huge blow to China's economy as well. Since nationalism is like a double-edged sword, it is

hard to control and may shake China's political stability to the core; therefore, politics and economy should be separated." Unfortunately, however, Professor Qingguo is one of the very few who share this view. The one-party, communist country's newspapers, broadcasting companies and experts have joined in the government's effort in fiercely pushing back against South Korea, and the government has repeatedly contended that Korea's deployment of THAAD threatens China's security.

Nevertheless, Beijing's fury with THAAD and retaliatory measures are unfounded and full of contradic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it wa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 which triggered the deployment of THAAD on South Korean soil. The deployment simply was the South's response to the North's provocation. Second, THAAD is a purely defensive system which does not carry destructive warheads, and its objective is to protect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U.S. Armed Forces in Korea (USFK) from the North's missile attacks. Third, THAAD is aimed at North Korea, not China. Also, the system is equipped with an AN/TPY-2 TM (terminal mode) radar, which detects and tracks enemy missiles and has a maximum detectable range of mere 800 km, not a FBM (Forward-Based Mode) one, which is deployed in Israel and Japan. Fourth, even if the THAAD radar can reach into some parts of Chinese territory, such military capability will not match that of China which has large and powerful radars installed in Heilongjiang and Shandong Province to monito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but also the Western Pacific and a few dozens of spy satellites. Therefore, it is absurd for China, a nuclear power, to claim that South Korea's THAAD radar poses a security threat to it.

Fifth, China now goes too far so as to ignore South Korea's sovereign security, not the other way around considering the severity of North Korea's increas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Kim Jong-un regime has conducted three nuclear tests and fired 46 missiles through 28 test-launches over the past five years. Today, Pyongyang continues to make frantic efforts to develop SLBMs, ICBMs and GORAE-class submarines (2,000 tons), solid-fueled missiles and new missile engines. In addition, China seems to have determined to rein in South Korea while keeping quiet about Japan's X-band radar deployment, hinting its anachronistic suzerain authority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he country's pundits have repeatedly explained these facts and tried to convince the Chinese government; yet, Beijing has demonstrated no interest in such explanation. China simply continues sort of double-play by officially participating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helping unofficially the Pyongyang regime to stay afloat.

Under these dire circumstances, Seoul continues to face an excruciating dilemma, and Washington has a new mission to carry out. Since South Korea's survival and prosperity has greatly depended upon its important neighbor, China, it has gone above and beyond to maintain its non-hostile, friendly relations with its giant neighbor,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In this vein, Seoul must understand the reasons of Beijing's hyper-sensitivity over THAAD. Now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engaged in a new Cold War, conflicting views of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AAD are only natural: Seoul sees the deployment as a means to secure sovereign security as it is destined to live under increasingly grave threat of North Korean WMDs while Beijing, which is challenging Washington to embark on a new era of China-dominated order, feels under siege from an implacably hostile American power. Against this backdrop, South Korea, without a doubt, should make utmost effort to convince China to see eye-to-eye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in order to stabilize Sino-Korean relations. That being said, if China infringes upon Korea's security rights, Seoul will have to sternly respond to such actions.

Now is high time for Seoul to use its own leverages to countermeasure Beijing's retaliation. South Korea's never-ending patience and concession only lead to heightened reprisal from China, thereby worsening Sino-Korea relations even further. Also, South Korean citizens should respond to China's revenge backed by the government, press and public through demonstrating the strength democratic maturity. If 8 million Chinese stop coming to South Korea, 4.5 Koreans should refrain themselves from visiting China. Likewise, if Korean products are boycotted in China, Chinese product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in Korea. In addition, Korea should reduce it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o the sustainable level in the long term; it will require painstaking effort to bring down the level of dependence since Korea's dependence on China is bigger than that of China, but without dropping the country'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t will not be able to facilitate non-hostile, friendly Sino-Korea relations to take root and sustain.

In the same vein,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s regarding THAAD; thus, it should not consider issues surrounding the deployment as someone else's problem. Recently, the United States has been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n Europe designed to protect NATO allies from missiles launched in the Middle East. In fact, Washington deployed the U.S. AN/TPY-2 (X-band) early warning radar system with a detectable range of over 1,800 km in Turkey in 2012, and it deployed Aegis-capable ships in Spain. In 2016, the United States activated a land-based missile defense station in Romania, and building a missile

defense complex in Poland which will be completed in 2018. As well, a command-and-control center will be built by the United States at Ramstein Air Base, Germany. Moscow perceived the aforementioned actions as a NATO build-up in Eastern Europe; thus, it has sped up the process of modernizing its nuclear military power and deployed a new short-range missile to threaten NATO allies. Such hostility has led to a European version of a Neo-Cold War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it did not trigger Moscow to economically sanction relevant countries for deploying American missile defense systems. For instance, the Kremlin never boycotted products from Germany, Spain, Turkey or Poland or banned Russian tour groups from visiting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over the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systems.

As the United States' construction of military stations in Europe was done based on its treaty with NATO allies, Washington's placement of forces in, dispose and withdrawal of military equipment to South Korea are actions pursuant to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1954) and 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1967). In other words, as Russia does not interfere with the United States' operation of its military forces in Europe according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China should not meddle with the same in Asia based on its bilateral alliances with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operation of its military forces in its Asian allies is a matter of sovereign security and no different than China's recent decision to move its ICBMs from the western region to Heilongjiang Province and deploy radars to monitor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Japan without experiencing neighboring countries' interference. Consequently, China's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over the USFK's deployment of THAAD is not only an act of officious interference in but also an impudent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alliance policy as a whole.

The ROK-U.S. alliance is vital to Korea's security, and as the North's nuclear provocation increases, it will become even more vital. Despite South Korea's fervor to maintain and advance stable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the relations have soured over the conflicts surrounding THAAD. Against this backdrop, the South Korean public hopes to witness the United States carrying out a meaningful action to respond to China's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one of Washington's biggest allies, South Korea. Diplomatic rhetoric is not enough. On March 17, 2017,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Minister, Yun Byung-se, during his visit stated that China'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was "inappropriate and troubling," and urged Beijing to "refrain from such action." However, these simple comments seem far from enough to make China back down.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let China's 'South Korea bashing' go on, such inaction will weaken the ROK-U.S. alliance and undermin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rust on the United States' overall alliance policy. This is the reason why many South Koreans pin great expectation on the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Xi, scheduled to be held at the beginning of April.

As of the end of 2016, the dependence of Korea on China in terms of its annual export, import and trade surplus were 26%, 16% and 60% respectively. Meanwhile, China's dependence on Korea for its export and import were 4.3% and 9.7% in the same order. The Korean economy's trade dependence is about 100%, far exceeding that of China (47%), Japan (36%), the United States (30%) and Germany (85%).

In 2013 Russia deployed Iskander (a maximum range of 500 km), a state-of-art short-range missile, in Kaliningrad, an exclave in the western borderland. It has also escalated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forces through developing Borei-class submarines (24,000 tons) and a new ICBM, Bulava.

Article IV of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II(1) of the US-ROK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United States is granted,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use of facilities and areas in the Republic of Korea.

간담토론회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토론

[토론①]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

장 광 일

前 국방부 정책실장

1. 사드 배치의 본질

○ 사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 보강 차원에서 추진된 우리의 주권적이고 자위적, 방어적 조치

○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배치된 요격미사일(PAC-2, PAC-3)로는 북한의 미사일(스커드, 노동 등) 요격에 제한

※ 패트리엇은 요격고도 2-30km, 국지방공효과, 1회의 사격기회, 발사속도 등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어 노동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한계

※'14년 6월, 전 연합사령관 스카페로티 장군이 사드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 사드는 종말단계 고고도 요격미사일로서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고도 40-150km, 광역방어효과, 다층방어로 최소 2회 이상 사격기회,

핵 EMP, 조기확산탄, 화학탄 등 40km 이상의 높은 고도 타격으로 지상에 피해주지 않고, 우리 군 독자 Kill Chain, KAMD 구축이전 전력공백 보완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 TPY-2 TM 레이더, 발사대, 요격용유도탄,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레이더 탐지거리는 한반도 방어 수요범위를 미초과

○ 사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지만 미국의 무기체계로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운용될 예정

2. 중국의 사드 보복

○ 한미가 작년 7월 성주 지역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다분히 내정 간섭적이고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대국은커녕 2류, 3류 국가 보다 못한 치졸한 행태와 노골적인 여론전 전개

○ 중국은 사드배치 반대 명분으로 마·중간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 관계를 호도

※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는 사거리 2000km인 조기경보레이더(FBM)가 아닌 사격통제용 레이더(TM)로서 유효탐지범위가 한반도에 국한

○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MD편입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독

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Kill Chain, KAMD)를 구축, 다만 효율적인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은 불가피

○ 중국은 사드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최근 사드 보다 훨씬 강한 탐지거리 3000km 수준의 ‘텐보’레이더를 네이멍구에 배치(헤이룽장성에 도 수천km급 레이더 운용중)

○ 중국의 도를 넘는 비이성적 무리한 보복조치는 사실상 한미동맹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을 한미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중국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중국내의 반한감정 못지않게 한국과 국제적인 반중정서를 자극하고 중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

※ 결국 중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며 소탐대실을 결과 초래가 예상됨

3. 미국의 대응

○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

○ 그간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차원에서 사드 배치 당위성에 대한 원론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조치에 관련하여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정도

○ 그러나 지난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Tillerson 국무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는 불필요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정작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상세 면담 결과는 미공개

○ 사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이고 중국의 보복이 한미동맹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약자인 한국만 괴롭히고 있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계속 확산될 경우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 확산과 더불어 반미감정이 조성될 휘발성이 높은 상태로 미국이 더 늦지 않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바람직

4. 한국의 대응

○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절제된 대응을 평가하나, 여론은 무기력한 정부의 태도에 비판적

○ 중국이 자신들의 조치가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한국내 여론이 나뉘어 있고, 특히 정치권과 일부 대권주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바뀌면 사드 관련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기인

○ 따라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국의 힘이 약해서라기 보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으로 국의 차원의 여론 결집과 한 목소리가 절실한 실정

○ 당장의 보복이 두렵다거나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고 부당한 압력에 굴종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고 전략하고 향후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음.

○ 우리 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도 국민적 결의로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극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참고할 필요

※ 자강(自彊)의식으로 킬체인 뛰어넘는 독자 전략무기개발의 전기로 삼아야

[토론②]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국은 굳이 사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태도, 최근까지 미사일 개발 행태를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들어 죽기살기식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등 사거리별로 다양한 미사일군 개발 및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핵물질·핵기술 능력도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북한은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해 플루토늄(Pu) 및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함께 가동 중인바, 향후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은 Pu 약 52kg 및 HEU 약 280kg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Pu는 6kg씩, HEU는 80kg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4월 9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새형[신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성공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들이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비핵화한 사례도 없거니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와 북한과 관련국들 간에 지속돼 온 오랜 불신으로 인해 일단 핵무장의 문턱을 넘으면 비핵화로 역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했다.

따라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첫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둘째, 비핵억지력(사드, 킬체인, KAMD, 조기경보 역량), 셋째, 국제제재와 공조 등 세 가지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한국은 사드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이므로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한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맞서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중 하나이다.

그러한 사드에 대해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해서 중국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막대한 보복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크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이전에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깬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사드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최근 스커드 계열 미사일 4발을 발사 하면서 주일미군 기지 타격, 핵탄두 장착 연습을 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은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북한 스스로 사드 배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은 왜 외면하려 하는가?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순수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하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의 의도를 불신하고 한국이 미국의 MD 방어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은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의도에 관한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흔들지 말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통해 푸는 것이 대국다운 길이다.

[토론③]

THAAD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적 행태

이 춘 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그동안 보류하고 있던 사드 미사일 배치 논의를 시작했고 7월 초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는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전혀 정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응이었다. 사드 미사일은 폭발력이 없는 순수한 방어용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사태가 이토록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케 한 잘못은 한국 정부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를 마치 공개토론에 부쳐야 하는 정치적, 외교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했다. 사드 문제는 원천적으로 협상불가능(non-negotiable)하고, 비밀스런(confidential or secret) 군사 전략적 이슈(military and strategic issue)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전략무기를 구입하고 배치하는데 이토록 어설편 수 있단 말인가?

THAAD를 반대하는 중국의 황당한 이유

주한미군 사령관 스키타 대장이 미국 정부에 대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요구한 것이 사드 논쟁의 발단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점차 위협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고, 이에 ‘주한미군 보호용’으로서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본국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중국이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중국의 반발에 겁먹은 한국 정부는 차일피일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주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총 28회에 걸쳐 46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김정일 정권기간 18년 동안 발사한 16발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노한 적은 없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 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인 수준의 분노를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도 보였다면 북한 핵문제는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정치학적 진리는 중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비록 핵개발로 인해 말썽을 피우는 골치 아픈 나라일지라도 없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중국은 북한은 국가안보의 안전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와 공격용 미사일을 수 백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배치한 순수히 방어용인 미사일을 가지고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과학적 이유는 아니다.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정치적 좌절감 혹은 분노 때문에 중국이 저러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에 부착된 레이더로 만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지만 미국은 만주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이미 오래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요격 당할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을 향해 날아갈 때 만주상공을 날아가지도 않는다. 사드미사일의 요격 범위가 200Km 인데 반해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1000Km 우주를 나르게 되어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당면하게 된 군사적 위협이란 그 실체가 정확하지 못한 이야기일 뿐이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결단이다.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 완료되어야 할 사안이다.

Amateurish Behavior of Korean Government on THAAD Issue

Choonkun Lee

Only after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on February 2016, ROK government had reluctantly begun to talk about deploying THAAD and it decided to deploy THAAD on July same year. Deploying THAAD on the South Korean territory is a minimal response agains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the Nuclear Weapons System which is proven to be an impossible task for both 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halt.

Although it gathers enormous political noises, THAAD is purely a defensive system that event does not have explosive warhead.

It is uncomfortable to recognize but South Korean government's amateurish handling of the issue is the partial reason for such a chaotic situation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THAAD. THAAD should be a non negotiable, confidential, secret military and strategic issue.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make it a negotiable, open political or diplomatic issues. I never heard about a nation whose average citizens eagerly participate open discussions about highly sensitive national security issues.

China's absurd opposition against THAAD

THAAD controversy had occurred just after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had requested American government to deploy THAAD for the protection of American soldiers deployed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rising threat of North Korean missiles on June 2014. Chinese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AAD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o was worried about the worsening relations with China, postpone the discussion of deploying THAAD on Korea. In the meantime North Korea's Kim Jong Un had continued testing missiles and nuclear bombs. China had never been really angry about North Korea's bad behavior as they were angry about South Korea's THAAD decision.

Now, it is fortunate for South Korea to recognize the real meaning of China for Korea's national security. China is still an ally of North Korea and Chinese never want to see North Korea gone away even though it is a nuisance to China. Survival of North Korea is a strategic interest of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regard this as a real fact.

China has several missile bases with about 1,000 missiles that are aimed at the targets in

South Korea. In this regard Chinese anger toward S. Korea on THAAD issue is a severe violation of Korea's sovereignty. China's reasons of anger due to THAAD are also groundless. THAAD cannot intercept Chinese ICBMs even though the X band Radar attached to THAAD system can peep part of Manchuria, the place where the United States had clearly watched for a long time with better intelligence gathering devices.

THAAD is a sovereign issue for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life and death of a nation.

서울시 중구 통일로86, 바비엥3차 6층(순화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

